



독일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및 효과

김유미 연구원

독일은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으로 인해 출산 기회비용이 높아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프랑스 여성들은 보육시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을 통해 출산 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감소하던 출산율도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음

■ 독일은 가정 내 전통적인 성 역할이 뚜렷하고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 및 어머니의 일자리 포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출산 기회비용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 여성들은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출산 후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차이가 주당 2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은 출산 기회비용을 높여 저출산¹⁾으로 이어지게 하고 장기적으로 가족의 웰빙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도 경제적 손실을 줌²⁾

■ 프랑스는 독일의 여성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받아 독일보다 높은 출산율³⁾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의 워킹맘들은 보육시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1) 독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 최저수준인 1.24명을 기록함

2) OECD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남성 수준에 도달할 경우 GDP는 20년 후 12%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OECD(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3) 2015년 기준 25~54세 여성 고용률(employment rate): 독일 72.9, 프랑스: 75.9, 노동시장참여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독일 82.5, 프랑스 8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독일 1.5명, 프랑스 1.9명

- 3~5세 자녀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E'cole maternelle)에 다닐 수 있으며,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자녀는 취업 여성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원(Cre'che) 또는 개인 보육사를 이용할 수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노동시간 등의 요인들도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독일의 워킹맘들은 근로시간 제약, 보육서비스의 부족으로 출산을 보류하는 경향이 크고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비교(독일 vs 프랑스)

구분	여성 교육수준 (필수교육 vs 고등교육)	여성 근로시간 (풀타임 vs 파트타임)	가계소득
독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2배 높음	근로시간과 상관없음	아내소득 낮을수록, 남편소득 높을수록, 부부소득차이 클수록 높음
프랑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30% 높음	풀타임일수록 출산율이 낮음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 미미(정책적 지원 활용), 부부소득차이 영향 미미

자료: OECD(2017),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근로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⁴⁾
 - 2007년에는 부모수당(Elterngeld)⁵⁾, 2015년에는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⁶⁾를 도입하여 근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길어지지 않도록 함
 - 2007년 개혁의 효과로 아버지가 부모수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2006년 3.5%에서 2008년 20.8%, 2014년 34.2%로 증가함
 - 최근에는 자녀의 유년기를 함께 보내고자 하는 부모⁷⁾들을 위해 특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풀타임까지 늘려나갈 수 있는 가족근로시간모델을 도입함
-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였고 출산율도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음

4) OECD(2017),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5) 자녀 출생 전 수입에 따라 월 300유로에서 1,800유로(월 순소득의 67%)까지 지원하며, 아버지도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부부에게 2개월을 추가하여 14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을 줌(파트타임의 경우 24+4)

6) 부모 모두 주당 25~30시간 근무하면서 부모수당플러스를 신청한 경우 4개월의 파트너십 보너스기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7)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따르면 아버지 중 79%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며, 2/3는 현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느낌

- 가족근로시간모델은 자녀보육과 커리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감소시켜주고 임금 및 연금의 성별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평가받고 있음⁸⁾
- 출산은 곧 일자리 포기로 인식하고 자녀 취학 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던 여성의 비율이 2002년 46.6%에서 2012년 21.8%로 감소하였으며, 자녀가 등교한 후에도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14.3%에서 6.8%로 감소함
-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출산율도 2010년 1.39명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에는 1.5명으로 1982년 1.51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의 출산율을 보임 **kiri**

8) BMFSFJ(2014). Family report 2014 – Benefits, Effects, Trends , German Ministry of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Berlin